

檢察,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 열람 거부

- 경찰청 과거사진상위, 정보조회 및 자료접근권 보장 촉구 -

검찰에 위원회 발족되면 조사결과 이관할 터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가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 요청을 검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경찰청 과거사 10대 의혹사건으로 선정하고 최근 검찰에 수사 기록과 공판기록 전체를 등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었고, 검찰은 『오는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기회가 마련됐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록 등사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과거사진상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있어 국가기관의 공식적 문서자료가 핵심관건이 된다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3조 4호 등에 규정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조회 및 자료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대해, 검찰청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을 계속 제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당사자 및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당시 참고인에 대한 증언 청취 등 진상규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과거사 진상위는 『검찰청이 굳이 가짜회경 형식을 빌려 자료협조 거부 사실을 밝힌 것이, 과거사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기관단위의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거나, 또는 경·검 수사권 조정 문

제와 연관시켜 행한 조치라 아니기를 믿고 있으며, 차제에 경찰청 과거사진상위는 과거의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과거사진상위는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거사 진상위는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서필적 허위감정 여부 확인 및 국민들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여론을 근거로 본건을 경찰청 과거 의혹 10대 사건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본건의 수사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므로 본건을 경찰청 과거 의혹 10대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로서 적절치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건의 수사주체가 검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검찰청 자체의 과거사진상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본 건은 경찰이 부분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에 ‘경찰청 과거사진상위가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검찰청의 주장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검찰청 자체의 과거사진상위가 발족되어 공식적으로 본 건의 이관을 요청할 경우,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경찰청 과거사진상위에 이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당시 재야단체인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전민련 총무부장이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1992년 7월 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서울경찰청 傘下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일부경찰서는 명칭도 변경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1구(區) 1경찰서'를 골자로 한 경찰의 관할 구역 조정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관할구역 조정의 핵심은 1개 자치구의 치안을 1개 경찰서에서 맡기는 것으로, 단 강남구·서초구 등과 같이 주민 수가 많고 면적이 넓은 자치구는 한 자치구를 경찰서 2개가 맡게 된다.

서울의 경우 최대의 상권인 명동이 중부서 관할에서 남대문서로 이관되고, 황학동 벼룩시장이 성동서에서 중부서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의 31개 경찰서 가운데 명칭변경이 확정된 곳은 6개로 대부분 해당 자치구의 이름을 따라가게 되는데, 청량리 경찰서는 동대문구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로 개명이 확정됐고, 종로구 일대를 담당하는 기존 동대문서는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60년간 정들었던 이름을 청량리서에 넘기게 됐다.

대신 동대문서는 ‘인의’ ‘돈화문’ ‘혜화’ 등의 새 이름 후보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금천경찰서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며, 노랑진서는 동작서, 북부서는 강북서로 각각 자치구에 걸맞게 개명되며, 동부경찰서는 광진경찰서로 바뀌게 된다.

한편 관할구역 조정으로 일순이 크게 늘어날 경찰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순이 줄어드는 경찰서도 생긴다.

신림 8동을 제외한 신림동 일대와 남현동을 각각 남부서와 방배서로부터 넘겨받는 관악서는 관할구역 인구 수가 현재 27만명에서 50만명선으로 배 가까이 늘면서 ‘매머드급’ 경찰서로 발돋움하게 됐다. 중부서도 성동서로부터 신당동 일대를 넘겨받아 관할지역의 인구가 2만 7천여명에서 11만명선으로 경찰서 관할이 넓어지게 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강남서와 수서서가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서초서와 방배서가 반포로를 기준으로 관할이 조정돼 수서서와 방배서가 상당한 ‘이득’을 본 반면, 종암·방배·도봉·서부 등은 다른 자치구에 걸쳐있던 담당구역을 인접 경찰서로 넘겨주면서 치안 수요가 줄어

들게 되었다.

서대문서로부터 평창동을 넘겨받는 종로서의 경우 그럭저럭도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를 행하기도 바쁘게 고위인사들의 집이 밀집한 평창동 경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중부서는 100년 가까이 담당해오던 명동을 남대문서에 넘기면서 ‘명

동 관할서’라는 상징적인 지위까지 함께 내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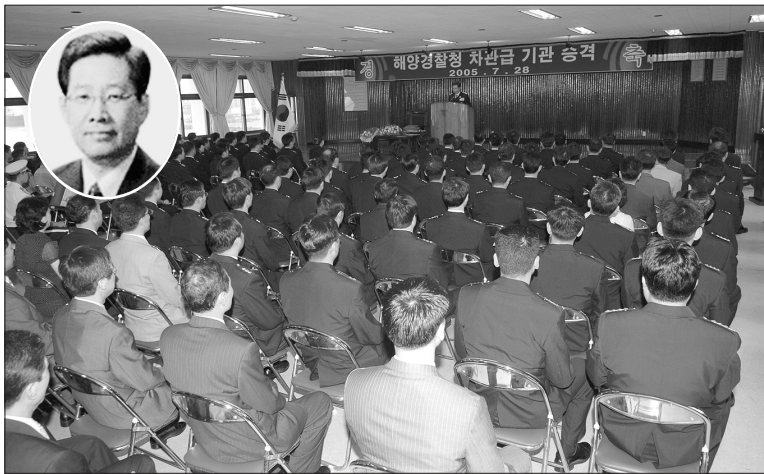
경찰관계자는 『관할구역 조정은 순전히 주민 편의와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부 불만이 없지 않지만 조직 혁신 차원에서 대응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라면서 『1구 1경찰서로 관할구역이 조정된다고 해서 이를 서세(輿勢)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앞으로 강·절도범 검거는 관할개념과는 상관없이 광역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순직한故 서영호 치안정감 안장식이 지난 7월 29일 오후 4시 국립대전 현충원 간부묘역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어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다.

해양경찰청, 차관급 廳으로 승격

- 李承載 해경청장, 치안총감으로 승진 재취임 -



해양경찰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의 직제개정안 확정에 따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사진 원내)이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지난 7월 28일 그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승재 청장은 『해경청의 차관급 승격은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1세기 해양영토수대에 꼭 필요한 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단순한 치안이 아닌 총괄적 해양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 경비와 구난, 국제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오염 예방과 관리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

고 있는 임무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청장 직급이 현행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차관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책홍보관리관과 국제협력관(국장급) 등 2관과 항공과, 수상레저안전과, 조함단 등 3과가 신설되면서 조직체계를 국민중심의 해양치안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 동안 해양경찰청은 16개 외청 중 인력 3위, 예산 5위의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1급기관에 머물러 국내의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996년에 해경청이 해양수상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으로 증대된 국민의 해양안전·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해양사고 등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폭 확대된 해양경찰의 역할·기능 및 조직규모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정부조직법 관련 당정협의시, 통계청·기상청과 더불어 해경청장 직급 상향을 등시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고, 지난 4월2일 대통령 주재 혁신위원회에서 해경청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스템(BSC)의 성공적 도입 사례를 발표하자 국무총리가 청장직급 격상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직급 상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주목받아 왔다.

한편 해경청은 현재 전국에 13개 경찰서와 71개 파출소를 운영하면서 해상치안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직제의 격상과 더불어 동·서·남해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지방청 개념의 지방본부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地下鐵 警察隊, 5개 지방청 동시 발대

- 地下의 테러·범죄에 적극 대응 -



경찰청이 최근 런던 연쇄 폭탄테러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5개 지방경찰청에 ‘지하철 경찰대’를 동시에 발대했다.

이번에 창설된 ‘지하철 경찰대’는 서울은 지하철 규모에 걸맞게 총경급 대장을 배치하며, 현행 134명 체제에 순찰인력 40명과 수사팀 2개(1팀 6명)를 증원하고, 지하철 범죄분석과 대책수립 및 경력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원팀을 신설하여 행정과·순찰과·수사과로 재편하는 등 현행 ‘지하철 수사대’를 194명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또한 출장소 단위로 운영되거나, 수사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부산·대구·인천·경기는 경감급 대장을 배치하고, 수사팀 신설 및 순찰인력을 증원하여 지원팀·순찰팀·수사팀의 체제를 갖추는 등 치

안수요의 변화에 맞게 편제와 기능을 재정립하여 다양한 치안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특히, 순찰팀은 인력이 증원됨으로써 역사 및 전동차 승차 순찰, 취약시간대·취약지 거점배치 및 검문검색 활동 등 순찰기능이 대폭 보강되어, 대테러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출장소에 접수되는 각종 신고·지리안내 등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팀은 인

력과 조직의 확대로 서울 2·4호선을 재정립하여 다양한 치안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특히, 순찰팀은 인력이 증원됨으로써 역사 및 전동차 승차 순찰, 취약시간대·취약지 거점배치 및 검문검색 활동 등 순찰기능이 대폭 보강되어, 대테러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출장소에 접수되는 각종 신고·지리안내 등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팀은 인

『한국경찰 60년사』편찬을 위한 선배 警友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년은 국립경찰 창설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 60년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중순경 「한국경찰60년사 편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팀에서는 알찬 내용을 담기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 동분서주한 끝에 800여점의 공식적인 서적이나 논문 등을 모았으나 60년 역사라고 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연유로 부득이 선배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특히 지난날 선배님들께서 경찰에 투신하시어 쌓아온 업적과 공로를 바탕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사료, 예컨대 문서나 사진, 메모록(업무노트), 임명·발령장, 유인물 기타 경찰간행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 등은 『한국경찰60년사』를 새롭게 쓰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하찮게 여기는 내용일지라도 저희 편찬팀에 연락해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역사편찬 사료로 활용한 후 돌려 드릴 것이며, 원하시면 금년 경찰의 날 개관예정인 경찰박물관에 기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자료들이 한데 모여 정말 가치있는 역사서가 편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인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한국경찰 60년의 기간 설정 :
 - 1945. 10. 21~2005. 10. 20
 - 2005. 10. 21 : 제 60주년 경찰의 날
 - 2006. 10. 21 : 제 61주년 경찰의 날

- 기본 사양
 - 권수 : 1집 5권(본문 3권, 자료집 2권) 기준 2,000집, CD 3,000세트

- 편찬기간 및 주요일정
 - 소 요 기 간 : 2005. 5.~2006. 10(1년 6개월)
 - 1차 기초자료 수집 : 2005. 4월~6월
 - 편 찬 완 료 : 2006. 10월초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09번지 경찰청 지하1층 112호실(우편번호 120-704)
- 연락처 : 02-362-6089 한국경찰60년사 편찬팀장 이병무(010-6456-7123), 경감 장희동(018-420-5781), 경위 김성철

경찰청 경찰 60년사 편찬팀

※ 사료를 제공해 주신 선배님들께는 발간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경찰60년사』1집(5권내외)을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